

17년 위법 방치했다 이제 바로잡겠다고?

풍암동 자동차매매단지 4개소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진입로 폭 기준 미달 지적에도 신규사업자 발급해줬던 서구청, 업체-구청 유착 의혹 내사

광주시 서구가 풍암동 자동차매매단지 허가 과정에서 잘못된 행정 처분을 바로 잡겠다고 17년 전 이뤄진 위법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사업자들에게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풍암동 자동차매매단지 4곳(풍암1·3단지, 오토파크, 오토갤러리)의 신규 자동차 매매사업자 신청·허가, 기존 자동차매매사업자간 승계(양수·도) 처분이 지난 2월 18일부터 전면 중단된 상태다. 풍암동 자동차매매단지 6곳 중 4곳의 신규 사업자 신청·허가, 기존 사업자 승계 조치가 전혀 이뤄지

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들 매매단지 4곳이 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기 위해 폭 12m 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현행법(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게 서구 입장으로, 위법 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새롭게 이 곳에서 자동차 매매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자들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풍암1단지의 경우 폭이 8·9m에 불과하고 풍암 3단지, 오토갤러리, 오토파크 등은 접한 도로(길이 160m) 중 일부 구간만 폭이 12m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법대로라면 애초부터 매매단지가 들어설 수 없는데도, 서구가 위법·안이한 행정으로 사업을 허가해줬다가 돌연 위반사항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감사원이 지난 2012년 감사를 통해 이같은 위법 사항을 지적한 뒤에도 8년 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책임을 지우겠다고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당시 서구가 “8·9m 진·출입로라도 차량 교행에 전혀 지장이 없고 오히려 여유로운 상황”이라며 “등록을 취하할 경우 행정심판과 소송 등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연차별로 개설해 민원해결을 하겠다”는 답변을 해오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사업자들은 더욱 납득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풍암 3단지 사업자들로서는 무려 17년 전 문제인데도, 풍암1단지(2008년), 오토갤러리(2012년), 오토파크(2008년) 사업자 등도 오래전에 지적된 문제를 이제와서 꺼내는 배경을 궁금해하는 상황이다.

감사원 감사 이후에도 풍암 1단지 자동차 매매 사업자들의 신규 신청·허가, 양도·양수 등 기존과 같이 이뤄졌기 때문에 갑작스런 서구 입장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자동차 매매사업자들은 급기야 광주시에 관련 내용을 질의, ‘행정청의 신뢰보호·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허가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개통이 예정된 도시계획도로를 조성해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치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

지만 서구는 강경하다.

2003년 허가 당시 현행법을 어겼음에도 허가를 내준 데 대해서는 “당시 담당자가 없어 파악하기 어렵다”면서도 “위반된 것을 이제라도 알았으니 바로잡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서구는 또 “자동차 매매업 등록 인·허가 문제는 자치구 고유 사무로 시의 입장은 서구와는 상관 없다”며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예정된 도시계획도로가 개통되더라도 위반 사항을 해결하려면 기존 도로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서구의 뒤늦은 조치 요구를 의심스럽게 보는 시각도 감지된다. 단지에서 매매사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018년 새롭게 운영에 들어간 매매업체와 서구 공무원 간 유착이 드러나면서 파면된 전례가 있다”며 나머지 사업자들의 영업에 지장을 주는 형태 특정 사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경찰도 이같은 매매단지 내 의혹과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들어간 상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공무원들 이 시기에 제주도행?

전남도 181명 15일부터 4박5일 연수 ‘논란’

전남도 공무원 180여명이 한꺼번에 제주도 여행에 나선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40명 가량 발생하자 정부조차도 ‘거리두기’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대규모로 제주도 여행길에 오를 예정이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은 전남도 소속 공무원 181명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제주도 연수·여행길에 오른다.

교육원이 마련한 공무원 연수 수료한 공무원 96명과 중견리더 양성과정 85명이 이번 제주도 탐방에 참여한다는 게 공무원교육원측 설명이다.

중견리더 양성과정 공무원들은 4박 5일간 제주 스카이워터스 공연, 환라산 등반, 우도 8경, 울레보트 체험, 쉬리의 언덕 및 울레 7코스 트래킹, 카멜리아 힐, 산방산 탄산온천 체험 등을 계획하고 있다.

공무원교육원 관계자는 “이들은 졸업여행 및 체력단련을 겸한 극기훈련을 떠나는 것”이라며 “중견리더 양성과정의 경우 참가 공무원들이 각자 돈을 걷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직 연수를 마친 공무원들도 같은 날부터 5일 간 제주도를 돌며 관광에 나설 예정이다.

공무원교육원은 지난 2월부터 계획했던 공무원 연수 일정을 코로나19로 늦춰다가 더이상 미룰 수 없어 5월부터 진행했다고 그에따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공무원들의 제주 연수비는 전남도가 전액 지원한다.

이들의 연수·여행 일정이 알려지면서 군이 이 시기에 여행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는 지적이 적지 않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아 정부조차도 모임 자제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단체로 여행을 가는 게 적절하냐는 얘기가.

당장,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내가 잡은 약속과 모임이 정말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취소 또는 연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간곡하게 요청하는데도, 전남도와 공무원들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교육원 관계자는 “최대한 고민하고 여러 상황을 감안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방역수칙과 안전 규칙을 지키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정치테마주 만들어 시세차익 품문 유포 60대 벌금형 선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종목의 주식을 정치 테마주로 분류,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인터넷 게시판에 품문을 유포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산 업주는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와 친인척 관계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3월 29일까지 ○○산업주 주식 10만 7790주를 매수한 뒤 해당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브리핑실에서 시중에서 판매 중인 부적합 크릴 오일 제품이 공개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 유통 중인 12개 크릴 오일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밝혔다. /연합뉴스

크릴오일 제품 12개 항산화제 등 초과 검출

식약처 부적합 제품 확인

“건강기능식품 아닌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알려져 흡소핑,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크릴 오일 제품 12개 중 12개에서 항산화제와 추출용매 성분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41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이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부적합 제품 12개 가운데 5개 제품은 항산화제인 에톡시퀸(ethoxyquin)이 기준치인 0.2mg/kg을 초과해 들어있었다. 이들 제품에는 에톡시퀸이 0.5mg/kg에서 최대 2.5mg/kg 검출됐다. 에톡시퀸은 수

산용 사료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사료에서 나올 수 있는 양을 고려해 갑각류, 어류 등에 남아있을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7개 제품은 혼합물에서 특정 물질을 용해하거나 분리할 때 쓰이는 추출용매 5종 가운데 사용할 수 없는 성분(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이 들어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성분(헥산·아세톤)이지만 기준치를 초과해 들어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며 “질병 예방·

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적합 제품은 ▲(주)힐링-크릴 100 ▲(주)네이처비에프-슈퍼센 크릴오일 ▲(주)엔젯오리진-남극크릴오일 500 ▲세움커머스-클린 크릴오일 1200 ▲아워네이처-올트라맥스 크릴오일 58 ▲블랙오닉스-블루오션 크릴오일 ▲에이지엘티-크릴오일 ▲(주)헬스하우스-크릴오일 1000 ▲내추럴삼육오주식회사-슈퍼 파워 크릴오일 56 등이다. /연합뉴스

농협 앞 공터 노점트럭 옮겨달라고 했던 농협직원 트럭 주인과 자리다툼 벌이던 남성에 살해됐다? 법원 “업무 이취지는 공간…산재 인정”

직장 앞 공터 내 영업중인 노점 트럭을 옮겨달라고 찾아갔다가 트럭 주인과 자리다툼을 하던 남성에 흉기로 살해된 경우 업무상재해(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진 모 농협 직원 A씨는 지난 2018년 1월, 직장 건너편에 위치한 노점 트럭에 갔다가 살해당했다. B씨는 자리다툼을 하던 트럭 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공교롭게 현장에 있던 A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당시 농협 앞 공터에서 이뤄지는 노점 트럭의 영업으로 해당 공간에서 진행했던 농협의 비료 판매 업무 등에 차질이 빚어지는데, 주차공간 부족, 노점 자리다툼으로 인한 소란 등을 지적하는 민원도 잇따르면서 “노점 트럭 위치를 옮기도록 하라”는 상사 지시를 받고 현장에 갔다가 살해당했다.

A씨 유족은 이같은 점을 들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 사망이 ‘직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살해 사건이 발생한 공터도 업무 공간이 아니고 농협 소유 땅도 아니라 관리할 권한도 없다는 점 등을 반영했다.

항소심은 “A씨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며 이를 뒤집었다. 광주고법 행정 1부는 “A씨가 영농자재 판매를 포함한 구매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어 해당 업무가 이뤄지는 공간인 사건 발생 공터도 업무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당시 공터에 쌓아놓은 비료를 농민들 트럭이나 트럭에 옮겨치신 업무도 맡고 있었다. 노점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설득하는 일은 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위인데다, 상사의 업무지시도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해당 행위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A씨 사건은 공터 사용과 관련된 다툼이 원인으로 A씨 업무에 내재돼 있던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고의사고! 허위입원! 허위청구! 과잉진료! 확대수리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메리츠, 한화, 롯데, MG, Heungkuk, 삼성, 신한, KB, 동부, Korean, SGI, AXA, AIG, TheK, NH